

코스피	2480.63	코스닥	680.67
	(-1.66)		(-2.24)
금리 (미국 9년)	2.829	환율 (원-달러)	1398.60
	(-0.044)		(+7.70)

## 이메일 보내듯 간편 수수료 ↓ 안정성 ↑

### 디지털화폐 CBDC 온다

#### (상) 외국인 송금

#. 2030년, 네팔에서 온 니루타 싱(가명·35세)은 한국에서 가사근로자로 일하고 있다. 최근 니루타 싱은 근로계약을 통해 월급을 '디지털 화폐(CBDC)'로 받기로 했다. 니루타 싱은 "부모님께 은행으로 매달 100만원씩 보내면 수수료도 많고, 기간도 오래걸려 여행을 통해 전달했다"며 "앞으로는 모바일 지갑을 통해 바로 보낼 수 있어 안심된다"고 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화폐(CBDC)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CBDC는 현금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법정화폐로, 현금 1000원을 은행에 예금하면 1000원을 토큰으로 전환, 전자지갑에 넣고 결제·이체할 수 있다.

2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CBDC 연구개발을 진행중인 전 세계 중앙은행 비율은 86%를 차지한다. 설문문에 참여한 65개 중앙은행 기준(선진국 중앙은행 21개, 신흥국 중앙은행 44개)으로 약 56개 은행이 CBDC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글로벌 중앙은행 86% CBDC 준비 모바일 결제 늘어 현금사용 감소 가상자산 수수료 없지만 변동성 ↑ CBDC 발행시 안정적 거래 가능

#### ◆ 하루만에 치솟는 가상자산 '투자목적 커'

중앙은행이 CBDC 개발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마트폰을 통한 결제·이체가 증가하면서 현금 사용이 줄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결제수단은 현금에서 실물(신용·체크)카드, 모바일기기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한 규모는 일 평균 1조5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1% 증가한 반면 실물 카드로 결제한 규모는 일 평균 1조4000억원으로 3.4% 감소했다.

늘어나는 가상 자산 또한 CBDC 개발을 부추겼다. 스마트폰을 통해 결제 하더라도 여전히 은행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발생하고, 국가를 넘어 거래할 경우 환차손이 발생했다.

가상 자산의 경우 은행을 거치지 않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고, 환차손이 발생하지 않지만 투자의 목적이 강해

#### (일반화폐·CBDC·암호화폐 비교)

	일반화폐	CBDC	암호화폐
발행주체	중앙은행	중앙은행	민간
발행형태	동전·지폐	전자	전자
발행규모	중앙은행 재량	중앙은행 재량	사전에 결정
교환가치	액면가 고정	액면가 고정	수급에 의해 결정

변동성이 크다.

예컨대 비트코인 1개가 1억원일 경우, 차 한대를 0.5비트코인으로 예약했다면 이 가격은 5000만원으로 거래돼야 하지만, 순식간에 8000만원으로 오를 수도, 2500만원으로 내릴 수도 있다.

단순히 자동차 가격 변동뿐만 아니라 국가 간 물가가 하루아침에 급증·급감, 신용위험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면 안정적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현재 1달러가 1300원이라면, CBDC를 통해 국가 간 거래시에는 1도(달러)과 0.000769도(원화)로 변환해 거래할 수 있는 것이다.

#### ◆ 국가간 CBDC 플랫폼 '송금비용 낮춰'

중앙은행은 CBDC 개발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송금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는 플랫폼에서 디지털화폐로 거래가 이뤄질 경우 확인 절차 등이 크게 줄어들면서 거래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부장은 "기관 간 거래비용이 줄면 소비자들의 송금 수수료 등이 싸질 수 있다"라며 "이메일을 보내듯 간편하고 저렴하게 해외송금이 이뤄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은 2021년 5월 133만명에서 2023년 5월 143만명으로 7.3% 증가했다. 외국인 4명 중 1명은 연 12회 이상 송금했다. 2000만원 이상 송금하는 경우는 2021년 5월 22.4%에서 2023년 5월 29.3%로 늘었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인은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한은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9만명이 부족했던 간병·육아와 관련된 돌봄서비스 부문 인력은 2042년이 되면 61만~155만명까지 부족해진다.

(2면에 계속)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 “AI기술이 국가 경쟁력… 윤리문제 중요”

### 2024 뉴 테크놀로지 포럼

유성준 세종대 AI융합연구원장  
“연구시설 부족… 국가지원 필요”

국내 인공지능(AI)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AI기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만큼 국가적 차원의 투자와 함께 기업의 인재양성이 필수라는 의견이다. 특히 AI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면서도 윤리적 문제를 해결해 균형 있는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풍연 한국SW·ICT 총연합회장은 메트로신문·메트로경제가 지난 20일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열린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서 "AI와 SW 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엔진인 만큼, SW·AI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세계 1등 국가를 목표로 육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초현실사회: AIGI가 재편하는 미래 생태계'란 주제로 열렸다.

(관련기사 L4·L5면)

이날 강연자로 나선 세종대학교 AI융합교수연구원장인 유성준 교수는 AI기술의 발전과 함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성준 세종대학교 인공지능융합연구원장이 20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메트로미디어 주최로 열린 '2024 뉴테크놀로지 포럼'에 참석해 기조강연 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다. 그는 "AI가 생성하는 답변이나 결과물이 한국 사회의 가치관과 문화적 맥락에 부합하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데이터를 수집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편향을 방지하고, AI 윤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유 교수는 이어 AI 연구를 위한 한국의 기반 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보유한 NVIDIA의 고성능 GPU는 약 2000개 수준이지만 이는 글로벌 경쟁에서 부족한 수준"이

라며 "AGI연구는 자본과 인프라가 필수적인 분야로,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득중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부원장은 생성형 AI 시대에 강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업의 AI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원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외부 환경에 맞춰 생성형 AI 경영 패러다임을 셋팅하고 오픈소스를 통해 활발히 공유되는 기술을 익힘으로써 자본과 기술 격차가 심화 되는 상황을 상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현배 딥파인 대표는 생성형 AI의 발전이 XR 콘텐츠 제작에 미치는 영향을 주목했다. 그는 생성형 AI가 XR 콘텐츠 제작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텍스트나 이미지를 입력하는 것만으로 고품질 3D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며 "실시간 처리와 초고해상도 구현이 가능해지면서 XR 콘텐츠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근우 화우 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는 "AI는 조력자일뿐, 사람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 m-커버스토리

## “적자재정·재정의 정치화 방지 필요”

### 국회, 재정준칙 논의 '시동'

국가채무 1067조… 지속 증가세 재정 건정성 위한 제도 장치 논의

저출생·고령화로 재정 지출 규모는 늘어나고 세입은 줄어드는 구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국가 재정 건정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위한 균형을 때기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 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운용 목표를 정한 규범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은 일정 기간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맞추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수지준칙'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 혹은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하는 제약조건을 가하거나 국가채무의 한도를 정하는 '채무준칙' 등을 법으로 정하지는 것이다.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국가 재정 운용에서 '적자재정 만성화' 현상을 겪고 있는데다, 정치권의 재정에 대한 입김이 세지면서 '재정의 정치화' 현상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했다. 더군다나 저출생·고령화의 여파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지출과 채무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면에 계속)

/박태홍 기자 pth7285@

## 뉴스터미널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 명태균 “김진태가 살려달라고 전화와… 컷오프 내가 앞은 것” /사진 뉴스1
- ▲ 홍준표, “이재명 법카 기소, 먼지떨이 식 수사 불과… 민주당 반발만 부를 것”

- ▲ 민주당, 국힘에 ‘쌀값 안정 긴급회동’ 제안
- ▲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제정책 역주행 우려된다”



- ▲ 이준석 “尹은 여론조사표 볼 줄 몰라… 몇 대 몇만 보는 수준” /사진 뉴스1
- ▲ 한동훈 “가상자산 과세 유예돼야…野는 800만 투자자와 싸우자는 건가”